

# “비트코인·이더리움, 증권 아냐”… 가상자산 기준 제시

美 SEC, 증권법 법령해석 지침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특성 없어  
NFT·믹코인, 디지털 수집품 분류



17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기준선을 담은 연방증권법 법령해석 지침안을 공개했다. /뉴시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의 성격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규정했다.

17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 같은 해석을 포함해 특정 암호자산 및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한 연방 증권법 법령해석 지침안을 공개했다.

SEC는 이번 지침안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등 대부분 암호화폐를 디지털 상품이라고 분류하면서 증권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했다.

SEC는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상품이 "기능적인 암호화 시스템의 프로 그램인 운용 및 수급에 연동돼 그로부터 가치가 결정되는 암호자산"이라고 정의했다.

암호화폐는 주식(지분증권), 채권(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 등과 달리 '타인의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라는 특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다.

NFT(대체불가토큰)나 밌 코인 등 수집을 목적으로 설계된 자산은 '디지털 수집품'으로 분류하고 역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SEC는 "실물 수집품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수집품의 가치는 창작자의 본질

적인 경영 노력에서 비롯되는 수익 기대가 아닌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각투자자와 같이 디지털 수집품에 대한 분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디지털 수집품의 제공 및 판매는 증권의 제공 또는 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에서 허가된 발행자가 발행한 '지불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을 그대로 준용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 달러화 등 특정 화폐에 교환가치가 고정되게 설계된 암호화폐를 말한다. 다만지니어스법의 발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이 같은 해석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디지털증권(토큰증권)의 정의도 명확히 규정했다. SEC는 이번 지침안에

서 디지털증권을 소유권의 전부 혹은 일부가 암호 네트워크상에서 유지·관리되는 증권이라고 설명하면서 "증권의 경제적 특성을 지닌 모든 수단과 증서는 형식이나 명칭을 불문하고 증권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등 증권의 경제적 특성을 지닌 증권이라면 블록체인(분산원장)에 기재된 증서 역시 기존 증권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10년이 넘는 불확실성 끝에 이번 해석 지침이 시장 참가자들에게 연방증권법상 암호자산에 대한 SEC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는 의회가 초당적으로 기본 입법을 추진하는 동안 기업가와 투자자들을 위한 중요한 사고 구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 소비자 보호 전면에… 금융권 전방위 점검

금감원, 검사 범위·강도 확대  
횟수 707회로 늘리고 인력 총원  
금융상품 내부통제 실태 점검

(2026년 검사계획) 전년 실적 대비 (단위: 회, 명, %)

구분	검사실시 횟수				검사 인원			
	2025	2026	증감	증감률	2025	2026	증감	증감률
정기검사	27	26	▲1	▲3.7%	11,150	9,178	▲1,972	▲17.7%
수시검사	626	681	55	8.8%	15,979	19,051	3,072	19.2%
현장	315	487	172	54.6%	14,590	17,551	2,961	20.3%
서면	311	194	▲117	▲37.6%	1,389	1,500	111	8.0%
합계	653	707	54	8.3%	27,130	28,229	1,099	4.1%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2026년 검사업무의 초점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맞추고 검사 범위와 강도를 전면 확대한다. 검사 횟수도 늘리며 현장 중심 점검을 강화해 금융회사 영업 관행과 내부통제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8일 '2026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산업 구축을 목표로 사전에 방적 검사 체계를 확립하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검사 횟수는 707회로 전년 대비 54회 증가한다. 특히 수시검사가 681회로 확대되며 검사 인력도 2만8229명으로 늘어난다. 정기검사는 소폭 줄어드는 반면, 현장 중심의 수시검사 비중이 확대되는 구조다.

검사 방향은 소비자 보호에 집중된다.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제조·판매·사 후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상품 설계 단계부터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고위험 상품의 경우

판매 절차의 적정성과 설명의 충실성까지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영업 현장에 대한 점검도 한층 강화된다.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영업 점을 선별해 본점과 연계한 검사를 실시하고,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고위험 상품 취급 지점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성과보수 체계가 단기 실적 중심으로 설계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지도 주요 점검 항목이다.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검사도 확대된다. 금감원은 불법 추심, 신용정보 부당 이용, 허위·과장 광고 등 부당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연체채권 관리와 채권추심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

크 관리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해킹 방지, 고객정보 보호 등 IT 보안 체계를 점검하고, 대형 전자금융업자와 플랫폼 사업자의 내부통제 수준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가상자산 분야에 대해서는 감독 체계 정비를 본격화한다. 가상자산 2단계 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별 준비 실태를 점검하고, 미비 사항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병행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은행의 CEO 승계, 사외이사 선임, 성과보수 체계 등을 점검해 지배구조 선진화를 유도하고, 책 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의 이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슈퍼사이클 기대… 삼성 목표주가 줄상향

외국계 IB들 '32만~34만' 전망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잇달아 올려잡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18일 삼성전자 목표가를 기존 29만원에서 32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직전 목표가 22만원에서 29만원으로 상향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노무라는 이번 목표주가 상향에는 2026년 2분기 예상 메모리 가격 강세와 파운드리 통합 개선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엔비디아가 연례 개발자 회의 GTC 2026에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베라 루빈' 시스템에 언어처리장치(LPU)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삼성전자에 새로운 파운드리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맥쿼리증권도 지난 2월 삼성전자 목표가를 34만원으로 제시했다.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24만원으로 제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맥쿼리증권은 "과거 중립적이었던 시각에서 메모리 공급 부족 심화에 따른 강한 긍정론으로 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용 D램낸드 가격은 2026년 1분기에 두 배로 상승할 전망"이라며 연



삼성전자 서초사옥.

중 내내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기존 20만5000원에서 26만원으로 약 27% 상향했다. 올해 영업 이익의 전망치는 기존 181조원에서 239조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영업 이익의 5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국내 증권사들도 목표주가 상향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KB증권은 최근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기존 대비 33% 상향한 32만원으로 제시했다.

하나증권 메모리 가격 상향에 따른 실적 개선과 밸류업 및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들어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하은 기자

## 개인 투자자 99% 시대… 삼성전자 집중

상장사 소유자 1456만명

(2.3%) 증가한 수이다.

국내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지난해 말 기준 1456만명으로 늘었다. 개인 투자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주식 투자 저변 확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2727사의 소유자는 중복 소유자를 제외하고 1456만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33만명

시장 전체를 관통하는 특징은 삼성전자 중심의 주주 풀립이다. 삼성전자 소유자는 460만5714명으로 단일 종목 기준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카카오(160만524명), SK하이닉스(118만6306명), 두산에너빌리티(111만7819명) 등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개인 투자자 저변이 확대되는 가운데에서도 투자 관심이 특정 대형주에 집중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소유자 구성은 개인 중심 구조가 뚜렷했다. 전체 소유자 가운데 개인은 1442만명으로 99.1%를 차지했다. 법인은 5만9311곳, 외국인인 3만1955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유 규모에서는 차이가 컸다. 개인이 보유한 주식은 564억주로 전체의 48.0%를 차지했지만, 1인당 평균 보유 주식 수는 3910주에 그쳤다. 반면 법인은 76만9765주, 외국인인 46만3379주로 개인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정윤 기자

## NH투자증권, IMA 영업 가능 종투사 지정

국내 IMA 사업자 총 3곳

금융위원회가 18일 NH투자증권을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을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종투사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이 자기자본,

인력과 물적 설비, 내부통제 장치, 이해 상충 방지체계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에 이어 NH투자증권이 종투사로 지정되며 국내에서 IMA 사업자는 모두 3곳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이들 증권사가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허정윤 기자